

설계사가 보험계약 갈아타기 유도... '부당승환' 주의보

7월 GA설계사 1200% 를 적용

금감원, 1분기 관련민원 54% ↑
해약환급금 손실 등 불이익 우려
고능률 설계사 확보 경쟁 양상

오는 7월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게도 1200% 룰이 적용되는 가운데 보험계약 갈아타기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액 정착지원금과 환수 조건이 결합될 경우 일부 설계사가 단기 실적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보험 해지와 신규 가입을 권유할 유인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계약 부당승환 관련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올해 1분기 금감원에 접수된 부당승환 관련 민원은 211건으로 직전 분기 137건 대비 54.0% 증가했다.

부당승환은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면서 유사한 새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 계약을 체결한 뒤 기존 계약을 해지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다. 소비자 입장에서 '더 좋은 보험으로 갈아타라'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바꾸지만 실제로는 해약환급금 손실, 보장 공백, 면책기간 재적용, 보험료 상승 등의 불이익



Chat GPT가 생성한 보험 갈아타기 이미지.

을 입을 수 있다.

부당승환 우려가 커진 배경에는 GA 영업조직의 설계사 유치 경쟁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 판매수수료 체계를 선지급 중심에서 분급 중심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오는 7월부터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1200% 룰을 확대 적용한다. 1200% 룰은 보험 판매 1차 연도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제도 개편 이후에는 정착지원금과 시책 수수료 등도 수수료 한도 산정에 포함된다. 그동안 GA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

되는 고액 정착지원금이 설계사 이동과 신계약 경쟁을 자극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던 만큼, 당국은 수수료 규제 차익을 줄여 잦은 계약 갈아타기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고능률 설계사를 미리 확보하려는 경쟁이 막판 과열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착지원금이 설계사가 이직할 때 지급받는 지원금으로, 일정 기간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환수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다. 이때문에 일부 영업조직에서 단기 실적을 채우기 위해 기존 고객에게 보험 갈아타기를 권유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소비자 피해는 주로 보장 공백에 서 나타난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 보험에 가입한 뒤 질병 진단을 받아도 신규 계약의 면책기간이 적용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장기간 유지한 보험을 해지하면 기존 계약의 예정이율이나 보장 조건을 잃을 수 있고, 나이가 오른 상태에서 재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높아지거나 같은 수준의 보장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1200% 룰 시행 전후로 설계사 이동과 판매채널 재편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부당승환 관리가 올해 보험사 내부통제의 주요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사와 GA가 판매실적보다 계약 유지율과 소비자보호를 중시하는 영업관리 체계를 갖추지 못할 경우 막판 영업 경쟁의 청구서는 소비자 피해와 제재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다.

김용태 한국보험대리점협회장은 "1200% 룰을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하려면 전산관리 표준모델 수립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며 "보험사의 지원 체계와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NH농협은행

중소·중견사 세무지원 'NH원클릭 세무' 오픈

NH농협은행은 중소기업에 최적화된 맞춤형 세무 지원을 위한 'NH원클릭 세무'를 오픈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제공 서비스는 ▲고용지원금 조회 및 신청 ▲법인세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최근 5년간 납부한 양도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의 진단 및 환급 신청 등이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복잡한 세무 업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고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우리금융

포용금융 주요성과 점검 첨단전략산업금융협의회

우리금융은 '첨단전략산업금융협의회'를 개최하고 그룹 포용금융 주요 성과와 향후 실행 과제를 집중 점검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5일 서울 중구 우리금융그룹 본사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자회사 CEO 및 지주 부문장 등 19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생활자금 및 자립 기반 지원, 포용금융을 통한 금융 안전망 확대 등 청년과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한 금융지원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임종룡 회장은 "청년은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세대로, 희망을 잃지 않도록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이어가야 한다"라며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지원 역시 금융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금융 안전망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금융당국, 대부업체 새도약기금 참여 인센티브 검토

업계, 새도약기금 참여 절반수준 대부업 매입대상 채권규모 4.9조 자금 장기분할 상환 전환 등 거론

민간 배드뱅크 '상륙수' 장기 연체 채권 추심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대부업계의 새도약기금 미참여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대부업계는 새도약기금 참여 시 업계 수익성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한편, 금융당국은 대부업 참여 유도를 위해 인센티브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새도약기금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업계는 상위 30개 곳 중 15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이후 새도약기금이 운영된 지 반년이 넘었으나 상위 대부업의 참여율은 여전히 절반 수준에 그쳤다.

새도약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공적 배드뱅크다. 금융권이 보유하고 있는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의 연체 채권을 매입한다. 새도약기금으로 넘어간 채권은 즉시 추심이 중단되며, 소각되거나 채무 조정된다.

대부업의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 장기 연체 채권 규모는 약 4조9000억원이다. 상위 30개사가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대상 채권(16조4000억원)의 약 30%다. 장기 연체 채권이 30개 대부업체에 고르게 분산돼 있다고 가정하면, 미참여 대부업권이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은 약 2조5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대부업계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하지 않는 배경에는 '매입가율' 문제가 있다. 새도약기금의 장기 연체 채권 매입가율이 대부업권의 기존 연체채권 매입가

율을 크게 밑돌고 있어서다.

새도약기금을 운영하는 캠코는 장기 연체 채권을 미상환 원금잔액의 5% 수준에서 사들인다. 반면, 대부업계는 금융사를 통해 이를 20~30% 수준에서 매입한 뒤, 추심 업무를 진행해 수익을 낸다. 업계는 비싸게 사들인 연체채권을 약 5%로 새도약기금에 다시 넘기면 수익 구조에 손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대부업권의 새도약기금 참여 확대를 위해 유인책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계를 소집해 장기 연체 채권 상환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핵심은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캐피탈사에서 빌린 자금의 상환 방식을 장기 분할 상환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대부업체는 수신 기능이 없어 저축은행과 캐피탈

사에서 자금을 조달해 연체채권을 매입한다. 이 과정에서 매입한 채권을 담보로 제공한다.

문제는 새도약기금에 부실채권을 매각할 경우 담보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이 경우 저축은행·캐피탈사가 대부업체에 대출금의 일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데, 당국은 이 같은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외에도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를 매입 채권추심업체에게 확대하는 방안이 함께 거론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미 대부회사의 채권 매각을 독려하기 위해 새도약기금 가입 대부업체에 대해 은행권 차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 연체채권 매입 펀드 대상 채권 인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해 왔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경기·인천 등 규제 빚겨간 아파트, 거래량 33% '급증'

구리시 4월 누적 거래량 3배 상승 인창·수택·교문동 등 고르게 확대

올해 들어 구리 아파트 거래가 급증하는 등 규제 지역 지정을 피한 경기·인천 부동산이 들쭉이고 있다.

18일 직방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경기·인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6만629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2.5% 증가했다.

경기도에서는 구리시의 거래량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구리 거래량은 1708건으로 전년 동기 468건에서 3배 이상 급증했다. 동별로는 인창동이 778건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수택동 385건

▲교문동 253건 ▲갈매동 206건 등 모든 동에서 고르게 거래가 확대됐다. 인창동은 동구릉역, 구리역이 위치해 있어 서울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좋고, 역 인근으로 대단지들이 포진해 있어 실수요와 함께 투자수요도 유입했던 것으로 보인다.

직방 관계자는 "광역교통 접근성과 함께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가 집중되는 양상"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목적의 매수만 가능한 만큼 즉시 입주자 어려운 수요자들이 비규제지역이나 상대적으로 진입 부담이 낮은 인접 지역으로 관심을 돌리는 흐름도 일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을 통

해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광명·과천·분당 등 12개 지역을 올해 말까지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안양시 만안구(+92%) 등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동탄과 기흥은 올해 들어 지난해까지 각각 3625건, 1429건 거래되며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직방 관계자는 "동탄은 GTX와 SRT 등 광역교통망을 기반으로 한 신도시 수요가 이어졌고, 기흥구는 서울 접근성 개선과 함께 인근 반도체 산업단지 및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기대감에 따른 직주근접 수요 영향도 일부 반영됐다"고 해석했다.

반면 경기도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성남시 분당구와 과천시 같은 기간 거래량이 각각 30%, 77% 감소했다. 분당구는 1274건, 과천시는 86건 거래되는데 그쳤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실거주 목적의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가능하며, 대출 규제 등으로 자금 조달 부담도 크다. 인천에서는 서구와 부평구가 각각 34% 늘었고, 연수구도 24% 증가하며 3개구가 거래를 주도했다.

직방 관계자는 "최근 임대차시장 불안 등으로 일부 전월세 수요가 매매시장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강화된 대출 규제도 자금 조달 문턱이 높아지면서 수요자들은 자신의 자금 여건과 실거주 조건에 맞는 지역을 선택적으로 찾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새마을금고

창립 63주년 이벤트

새마을금고는 이달 25일까지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새마을금고 창립 63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참여자는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통한 본인인증 후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1일 1회 참여할 수 있으며, 이벤트 기간 매일 새로운 문제가 출제된다. 이벤트 참여 고객을 위한 경품도 준비했다. 경품은 ▲메가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배달의 민족 상품권 2만원권 ▲신세계 상품권 3만원권 ▲새마을금고 굿즈 세트 등이다. /안재선 기자

